위기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대안 부상… 숨통 트일까

충원난에 유학생으로 시선 돌려
관련 제도 미흡해 미봉책 우려
부처간 유기적 협력 절실 목소리

박맹수(오른쪽)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과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이 지난 7월8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지방대학 시대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학령인구 감소로 깊어지고 있는 지방대학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중장기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줄어들고 있는 대학 입학생 수요를 유학생으로 메꾸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9개 지방자치단체와 84개 대학이 지자체별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히 유학생을 지방대학에 적극 유치해 지역맞춤형 인재로 양성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이는 지역 산업체 인재 공급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현재 지역 산업체, 일명 뿌리산업들은 일자리 부족이 아닌 젊은층의 취업 수요가 적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홍길 경남정보대 호텔관광계열 교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지방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지방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방대학에서 양성하자는 순환 상행 발전의 틀로 전략적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며 "맞춤형 유학생 유치 전략은 지방대학들에게 하나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확대 적용 등의 부처 간 유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2022년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구인난 지속,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외국인력 등을 고려해 연내 고용허가제(E-9) 규모를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적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다만 김 교수는 E-9 비자의 유학생들에게도 B-7(숙련기능인력 비자)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E-7 비자의 경우,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정기 선발과 수시 선발을 통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단, 해당 교육을 기술 교육, 직업 교육이 특화된 지방대학들과 연계한다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유학생 유치 경쟁 국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정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제도 개선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부처 간의 눈치 보기로 인해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정 한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전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위원회 위원장)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지자체, 기업체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학위·비학위)는 전년 대비 1만4611명(9.6%p) 증가한 16만6892명이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6만165명보다 6727명 많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당시에도 증가세였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한 이유는 케이팝(K-POP) 붐과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의 한국 영화·드라마 강풍의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팬데믹이 진정되는 내년 이후로도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일본은 '유학생 30만명 계획' 등으로 유학생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유학생 수를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난 8월 이를 재검토해 2027년까지 30만명 이상을 유치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일본은 처음 '유학생 30만명 계획'을 추진할 때, 유학생 취직 지원 정책 등을 각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하면서 2019년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은 31만명을 기록했다.

베트남 역시 최근 저렴한 가격 대비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돼 가성비 유학으로 꼽히고 있다. 그 결과 매년 해외 유학생 약 5000명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오 이사는 "대학 입학 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교육 협력의 핵심이자 대학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지방 소재 대학들의 핵심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내일부터 내년 1학기 국장 신청하세요"

교육부-한국장학재단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는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한 적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네이버 클로바와 AI 교육 '맞손'

'노코드' 기반 활용 AI교육과정 개발

(왼쪽부터)성낙호 네이버 클로바 사내독립기업(CIC) 책임리더와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학교는 지난 15일 세종대 대양AI센터 12층 컨퍼런스룸에서 네이버 클로바와 초대규모 AI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네이버 클로바가 보유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 클로바는 독자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제품과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엄종화 세종대 부총장, 조진우대외협력처장, 유성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성낙호 네이버 클로바 CIC 책임리더, 정주환 에반젤리스트 등 7명이 참석했다.

세종대는 이번 협약으로 '노코드(No-code)' 기반의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를 활용해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이다. '노코드'는 코딩 없이도 앱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대는 2023년 1학기부터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클로바 스튜디오' 사용법을 익히고 AI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회계지침' 마련

예산편성·집행 감독 실효성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을 최초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사립유치원에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각종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립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을 최초로 제정했으며, 2023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은 이 지침을 적용해 회계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먼저 예산 편성단가 기준으로 ▲관내·외여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특근매식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마련해 유치원마다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해당 회계연도 이월금 최소화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2024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기준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하는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다. 이는 예산이 당해연도 교육수혜자에게 적기에 투입돼 건전한 교육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누리집에 예·결산서 공개 의무도 준수하도록 한다. 누리집이 없어 공개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메뉴를 신설해 예·결산서를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이 유치원 현장에 조기 안착 되도록 지침 책자를 인쇄·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전문상담·지원단(현·퇴직공무원) 컨설팅, 비대면 상담 챗봇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교육부,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과태료제도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주제로 22일 '제5차 사회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과태료 제도가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 확보방안,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부과기준의 형평성, 부과금액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그간 부과기준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화폐가치 하락에도 과태료 금액은 수십 년째 변동이 없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와 정태용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과태료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